

연구보고서(수시) 2019-09

#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곽윤경  
주유선 · 우선희

**【책임연구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0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발행일 2019년 11월

저자 곽윤경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발간사 <<

오늘날 이주의 전 지구화로 인해 인구 이동의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가 전례 없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긍정적이던 시선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정 과제인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틈새를 잘 메워 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곽윤경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주유선 부연구위원과 우선희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원의 김기태 부연구위원, 상하이대 아시아인구연구소의 허나영 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 이주민방송 MWTV 운영위원 정혜실 선생님, 고려사이버대학교 이민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그리고 원내외 익명의 평가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1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8
<b>제2장 이론적 배경 .....</b>	<b>19</b>
제1절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 .....	21
제2절 사회적 포용의 관련 선행연구 .....	28
제3절 소결 .....	40
<b>제3장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b>	<b>43</b>
제1절 국내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45
제2절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	5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63
<b>제4장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b>	<b>65</b>
제1절 연구 방법 .....	67
제2절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	72
제3절 소결 .....	90

---

<b>제5장 결론 및 대응 방안</b> .....	<b>95</b>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97
제2절 대응 방안 .....	99
<b>참고문헌</b> .....	<b>107</b>

## 표 목차

〈표 2-1〉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다차원적 요소 .....	25
〈표 2-2〉 사회적 포용의 하위 영역과 측정 지표 .....	31
〈표 2-3〉 2018년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	33
〈표 2-4〉 2003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 관련 문항들 .....	34
〈표 2-5〉 유럽 사회 조사에서 관련 문항들 .....	35
〈표 2-6〉 국민통합의 사회적 포용 하위 영역과 측정 지표 .....	37
〈표 3-1〉 일반 국민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별 비교 .....	46
〈표 3-2〉 차별금지법안 추진 경과 .....	49
〈표 4-1〉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주요 변수 설명 .....	70
〈표 4-2〉 2014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	73
〈표 4-3〉 2016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	75
〈표 4-4〉 2018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	77
〈표 4-5〉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외국인 이민자·노동자 .....	79
〈표 4-6〉 2018년 권역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	81
〈표 4-7〉 2014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7500) .....	82
〈표 4-8〉 2016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8000) .....	84
〈표 4-9〉 2018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8000) .....	86
〈표 4-10〉 2014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	88
〈표 4-11〉 2016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	89

---

##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 .....	24
[그림 2-2]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기여하는 요인들 .....	28
[그림 3-1] 지역이민협의회(LIPs) 조직 구성 .....	58
[그림 4-1]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외국인 이민자·노동자 .....	79

---

## Abstract <<

### **Social Inclusion of Immigrant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Kwak, Yoonkyung

Although recent national attitudes are open and positive to a great extent toward an influx of immigrants, the social gap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seems to be difficult to reduce. Amidst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now faces a dilemma ove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ly inclusive society with ethnic and racial diversity. This raise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existing 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are strong enough to uphold the government agenda of achieving a socially inclusive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ocial inclusion of immigrant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raising the level of social inclusion for immigrants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looks at relevant policies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and analyse survey data to understand how the level of social inclusion toward immigrants has been changing and identify factors responsible for such chang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inclusion and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studies into the topic of social inclusion in the

---

Co-Researchers: Chu, Yoosun · Woo, Sunhee

## 2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field of migration. Also, it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relevant ministries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4<sup>th</sup>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23~2027). The last contribution would be to provide empir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measure of social inclusion toward immigrants in Korea.

\*Key words: social inclusion, immigrants, inclusive policie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에 따른 국민적 태도는 개방적, 수용적 태도를 보여 주는 듯하나, 아직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포용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과연 기존의 이민·다문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음.
-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해 사회적 포용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한 연구는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4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 각 부처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리고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객관적 척도 개발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함.

## 2. 이론적 배경

### 가.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

- 사회적 포용의 개념 및 특징
  - 사회적 포용은 인종, 민족,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류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영역에서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내국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결과로 정의함.
  - 사회적 포용의 특징 중 하나는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있는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거주자로서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차원적인 개념임.
- 이민 연구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결속
  - 사회통합, 사회적 결속 그리고 사회적 포용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보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사회통합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초점을 두며, 종종 다문화주의

와 연관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결속의 경우 국민-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타 문화가 아닌 동질적인 문화, 가치 및 관습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결합 및 화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됨.
- 사회적 포용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중 소외되고 차별받는 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과 완전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개념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광의적인 개념임.

#### □ 사회적 포용의 요인

- 사회적 포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a) 만족스러운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b) 주택, 교육,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c) 개인적인 적금을 제외한 수입 손실 위험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접근성

### 나. 사회적 포용의 관련 선행연구

#### □ 국내외 사회적 포용 척도

- 국외 척도로는 Maesen과 Walker가 개발한 척도가 있으며, 여기서 사회적 포용은 크게 시민권, 노동시장에서의 포용,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으로 구성됨.
- 또 다른 국외 척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민자 통합 지표가 있으며 고용, 교육, 주거, 보건, 시민 참여 및 사회적 포용 등 6가지 분야로 구성됨.

## 6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 또한 국외에서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는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종합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등이 있음.
- 국내에서는 은재호, 송정안(2017)이 개발한 국민통합 지표에서, 하위 영역인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 복지, 소득, 젠더 및 세대로 세분함.
- 국내에서 개발된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주된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 종족 배제 주의, 국민 정체성, 보편적 권리 수용 및 다문화 수용성 등이 있음.

## 3.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가. 국내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 지역주민 대상 인식 개선 정책 및 교육

- 정책적 측면: 제2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함.
- 교육적 측면: 일반 주민 및 초중고 정규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 2007년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래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음.
- 본 법안은 차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된 19가지 사유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고용 형태를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함.
- 또한,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이나 법원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판결 등을 규정하고, 차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제 수단으로 규정함.

## 나.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 영국: 2010년 기존의 개별 차별 관련 법안을 수정 및 통합하여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함.
  - 본 법은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령, 장애, 성전환, 결혼 및 시민동반자관계, 임신 및 모성,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 9개의 보호 속성을 명시함.
  - 또한 평등법은 공적 영역의 평등의무(PSE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를 강조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에서 ① 차별, 괴롭힘, 보복 및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근절, ② 서로 다른 보호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기회의 평등을 증진, ③ 서로 다른 보호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우호적

## 8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캐나다: 2008년 지역이민협의체(LIPs: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를 설립함.

○ 지역이민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주최자'의 역할을 하며, 이민자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이민협의체는 ① 기존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의체 내 다양한 주체 간 정보 공유,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② 이민자 및 관련 이슈에 무관심했던 기관들의 참여를 견인하며 ③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고 ④ 이민자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에 반영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협의체 내에서 모범적인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 간 목소리의 균형 문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됨.

## 4.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

○ 2014, 2016, 2018년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 분석을 진행함.

- 이민자를 나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민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였음.

- 이민자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하고,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소폭 상승함.

#### □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우선 2014, 2016, 2018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 서로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끼리 묶인 것인지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진행함. 또 요인분석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함.
  - 공통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보험 가입 여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됨.
-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요인들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함.
  - 공통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총 3개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2016년과 2018년에는 위의 3가지 요인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 중에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5. 결론: 대응 방안

###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금지 유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또 영국의 사례와 같이 평등의무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 직함.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 및 기타 단체에서도 평등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련 법안은 모든 차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의기구 재정비

- 각 지역에 있는 협의기구들을 재정비하여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내국인과 이민자를 분리하지 말고, 이들 모두 어우러진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 캐나다 사례의 한계점에서 지적되었듯이, 특정 지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성공적인 이민자들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인식 개선 교육

-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부터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부(모)국의 언어 프로그램, 다문화·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함.
- 그렇지만 관련 교육의 대상자를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인 역사가 짧아 이들의 부족한 인식 및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임.

□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류 확대

- 지역사회 차원에서 내국인과 이민자 간 접촉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독일의 스포츠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체육 활동은 특별한 언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인종 및 민족,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를 가진 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들과의 동료 간 연대의식, 소속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함.
- 또 지역사회에서 기타 자조 모임, 동아리, 동호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2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로 구성된 모임 혹은 동아리일 경우 가산점 혹은 인센티브 등을 두어, 그 결과에 따라 공간 대여 및 자금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척도 개발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주요 용어: 사회적 포용, 이민자, 포용정책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제정된 해인 2008년 115만 8866명에서 2018년 236만 7607명으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9; 통계청, 2019). 이민자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국내의 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이민자와 저숙련 이주 노동자였지만, 최근에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드문 유형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길강목, 2011). 향후 외국인 수의 증가가 이러한 속도로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민자와 그들 자녀 수가 총 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에 이르고(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와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즉 이민사회의 도래가 머지 않은 것이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국내에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증가함과 더불어 국민들의 태도 또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현 상태 수준의 이민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가장 적었다(정기선, 박성일, 박미화, 현리정, 2016). 또 한국인들은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이민자가 한국 문화 및 관습

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었다(김이선 외, 2019). 이처럼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사회는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포용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포용’이라는 개념은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수용-변용으로 더 나은 상태로의 진보’를 의미한다(은재호, 2019, p. 21). 이를 바탕으로 ‘포용국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리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보편주의, 사회통합, 분배 정의, 공생 등의 철학을 담고 있다(김미곤, 2019, p. 3). 최근 정부는 국정 목표를 2018년부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포용과 혁신을 근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은재호, 2019, p. 21).

같은 해 정부는 이러한 기초 아래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1, 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이민자가 자립하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 이민자들의 인권 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법무부, 2018, pp. 24-26).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1,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초기 적응을 도왔지만, 이들의 정주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p. 11).

이처럼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중심축이 변화됨에 따라, 과연 기존의 이민·다문화 정책

이 사회적 포용국가를 이룩하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이민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하지만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난 현재는,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 정서(public sentiment) 그리고 이민 수용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김혜순, 2019; 이규용, 김혜순, 송영훈, 최서리, 2018).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는 이민·다문화 관련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한국 사회적 포용국가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사실 국외 연구에서는 주로 이민자들의 태도 및 인식을 살펴보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유럽에서 내국인 정서, 즉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민에 대한 태도, 이민 수용성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김혜순, 2019).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어떠한지를 진단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탐색적 또는 기

초적 연구로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향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 각 부처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의 객관적 척도 개발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증대에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다룬 연구와 관련 대응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더불어 국내외 사회적 포용 척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은 한국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외 정책 사례인 영국의 평등법과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은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인 5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

제2절 사회적 포용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소결



## 제1절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사회적 포용의 개념 및 특징

‘사회적 포용’ 개념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국내외 문헌들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삶의 전 영역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고 성취하도록 고안된 과정”이라고 보았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p. 87). 즉,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민자에게 가용한 자원을 분배하고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연합(UN)에서는 “기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목소리 및 권리 존중을 통해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기원, 종교 또는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근거한 불우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UN, 2016, p. 20). 세계은행(World Bank, 2013, pp. 3-4)은 사회적 포용을 사회·제도적 그리고 개인적·집단적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포용은 “배제된 사람과 집단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이자,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정체성 문제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 기회 그리고 존엄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은 ‘다양성에 기초하는 구성

원의 공존' 가치가 핵심이다(은재호, 송정안, 2017). 따라서 인종, 민족,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류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영역에서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내국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김혜순, 2019; Mitchell and Shillington, 2002).

사회적 포용 개념 정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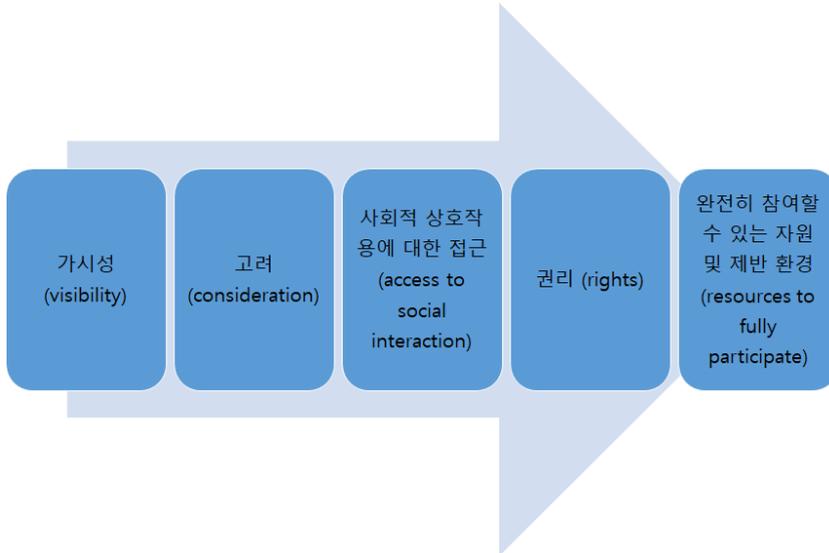
첫 번째,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은 종종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과 관련지어 이해된다(Cameron, 2006).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배제 개념과 정반대로 보고(Jackson, 1999), 사회적 배제 개념 정의를 통해 사회적 포용 개념의 본질과 의미를 단지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연구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의 정의와 특징을 명확히 언급한 기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사회적 배제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배제는 연속선(continuum)상의 양극단에 있는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한 반대 개념 그 이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은재호, 송정안, 2017; Hayes, Gray & Edwards, 2008; Walker and Wigfield, 2003, p. 9).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한 영역에는 포용되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Jackson, 1999).

두 번째,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은 거주자로서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Therborn(2007, p. 2)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2-1]에서 제시된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단계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접이다(United Nations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and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SPD and DESA, 2009, p. 14). 첫 번째 단계로 가시성(visibility)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UN DSPD and DESA, 2009, p. 14). 다음으로, 정책 입안자가 각각의 개인과 집단의 관심사와 욕구들을 고려(consideration)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종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욕구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UN DSPD and DESA, 2009, p. 14).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access to social interaction)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한다(UN DSPD and DESA, 2009, p. 14). 네 번째는 권리(rights)로, 여기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거주자가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체제와 제도에 관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Beck, van der Maesen, Thomese and Walker, 2001, p. 346).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면 이들의 권리는 실현되기 어렵다(Beck et al., 2001).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는 성공적이고도 완전한 사회적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궁극적인 마지막 핵심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그림 2-1]). 즉,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포용을 이루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권리 이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24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그림 2-1]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



자료: Therborn (2007). Presentation. Expert Group Meeting on Creating and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p.5;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and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SPD and DESA) (2009)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P.14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용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다(Gidley, Hampson, Wheeler and Bereded-Samuel, 2010).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의 다양한 하위 체계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넘나들며 기능하기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차원적인 포괄성을 고려해야 한다(정해식, 2012). 사회적 포용의 다차원성은 <표 2-1>에 제시된 것처럼 문화, 경제, 기능, 참여, 물리, 정치, 관계 구조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포용이 다양한 목표와 수혜자를 가진 여러 수준에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교육, 건강, 고용, 기본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은 부문별 정책과 연계된 영역을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성과 같은 영역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표 2-1〉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다차원적 요소

차원	사회적 포용 요소
문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기여도, 차이 인식, 다양성 평가, 긍정적인 정체성, 반인종차별주의 교육
경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적절한 수입, 사회 참여, 빈곤 퇴치, 고용, 인적 개발에 대한 역량, 안정적인 발전, 가치 및 돌봄 지원의 격차 축소
기능	참여 능력, 개인 개발 기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능력 인정
참여	권한 위임, 선택의 자유, 지역사회 기여, 의사 결정,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자원 및 참여 지원 능력
물리	공공장소 및 지역사회 자원, 물리적 근접성 및 상호작용 기회, 건전한/지원적 환경, 교통 접근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성
정치	인권의 확정, 정책 및 입법의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보호, 체계적 장벽 제거, 장기적인 견해, 다차원적 시민 행동을 취할 것임, 참여, 투명한 의사 결정
관계	소속감, 사회적 근접성, 존경, 인정, 협력, 연대, 가족 지원, 자원에 대한 접근
구조	자격, 프로그램 접근성, 접근의 투명성, 적극적 행동, 지역사회 역량 구축, 부서 간 링크, 정부 간 링크, 책임성, 의사소통 채널, 변화에 대한 선택권, 유연성

자료: Jeannotte 2008, pp.13; 은재호, 송정안, 2017.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 방안 연구, p.31에서 재인용, 일부 수정 및 발췌

## 2. 이민 연구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결속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민(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포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통합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p. 86)에서 “이주자가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으로 보고, “이민자와 수용국(receiving country) 쌍방의 적응 과정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Geust and Stamm(1993) 역시 사회통합은 권리, 평등 및 존엄성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내국인들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관계 및

제도를 촉진하는 역동적이고 원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반면 사회통합을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Castles and Miller, 2009). 즉,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문화를 고수하기보다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관습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내국인과 이민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민자의 문화와 주류 사회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사회적 결속 역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거시 수준의 과정과 이런 관계들을 지탱하는 하부구조와 관련되어 있다(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 1997, p. 323).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친구,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 등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관계의 속도와 장소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의 관련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Beck et al., 2001). 또한 전 지구적 이주(migration) 현상으로 다양성의 증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Demireva, 2017). 구체적으로 미국의 Costa and Khan(200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정치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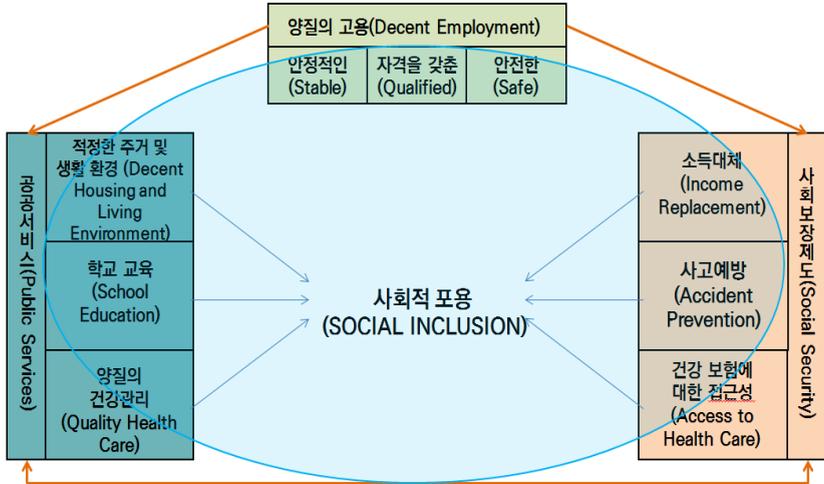
위의 유사 개념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포용,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보이나(Silver, 2010),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은 이민자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종종 다문화주의와 연관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

회적 결속의 경우 국민-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타 문화를 가진 이들이 아닌 동질적인 문화와 관습을 가진 구성원들 간에 결합 및 화합을 이루는 것으로 종종 이해된다(Rimmerman, 2012). 반면 사회적 포용은 이민자 집단 간, 그리고 내국인들 중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배제된 집단인 취약계층에게까지 기회의 평등과 완전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및 사회적 결속보다는 포괄적이면서도 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Rudiger and Spencer, 2003).

### 3. 사회적 포용의 요인

사회적 포용을 향상,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8)는 사회적 포용의 요인으로 a) 만족스러운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 b) 주택, 교육,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c) 개인적인 적금을 제외한 수입 손실 위험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접근성을 꼽았다(UNDP, 2018). 특히 고용은 사회적 포용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민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체류 자격과 행정적인 절차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UNDP, 2018). 물론 고용 자체가 사회적 포용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 포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UNDP, 2018).

[그림 2-2]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기여하는 요인들



자료: UNDP(2018). Capacity Building to Support Government in Promoting Social Inclusion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p. 7.

## 제2절 사회적 포용 관련 선행연구

### 1. 국내외 사회적 포용 척도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발된 사회적 포용 척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와 Zaragora 지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외 지수/지표이다. 전자는 정부의 법제도 및 정책을 평가하는 반면, 후자는 이민자의 통합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지표이다(정기선, 최서리, 2014, p. 40).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지수 및 지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민자에 대한 주

관적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도 및 지표 등이 조사에서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van der Maesen과 Walker의 사회적 포용 척도

Maesen과 Walker가 개발한 사회적 포용 척도는 <표 2-2>와 같다. 사회적 포용을 크게 시민권, 노동시장에의 포용,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지표에서 시민권은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이는 정치권, 사회권, 공민권, 사회적·정치적 관계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2-2> 참조). 정치권에 대한 세부 영역은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과 투표율을 통해 측정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사회권에 대한 세부 영역은 공적연금 수급률과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통해 노인과 여성의 사회권적 측면을 측정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공민권의 세부 영역은 무료 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과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관계의 세부 영역은 의회에 임명된 소수자의 비율과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비율로 측정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두 번째 사회적 포용의 하위 영역인 노동시장에의 포용은 유급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률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 지표를 이용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률은 한 번의 실업이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얼마나 제약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주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기 위함이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세 번째 사회적 포용의 하위 영역은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부 영역으로는 건강 서비스, 주거 서비스, 돌봄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통, 공공/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표 2-2)).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van der Maesen and Walker(2005)가 제안한 공공 1차 의료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을 이용하였다(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유진영, 김성아, 2014, p. 172).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학교 교육 참가율과 고등 교육 참가율을 이용하였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노숙자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의 대기 기간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관련 지표의 한계로 포함하지 않았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공공교통체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의 비율과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는데, 국가 비교 차원에서 지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계발전지표에서 도로집중도(Road density) 자료를 이용하였다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공공/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1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1만 명당 공공/문화 시설의 수의 지표 사용이 van der Maesen and Walker(2005)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성 영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사회적 지원 관계(social network support)의 자료를 이용한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20; 정해식, 2012, p.26에서 재인용).

〈표 2-2〉 사회적 포용의 하위 영역과 측정 지표

하위 영역	세부 영역	개념적 지표
시민권 (Citizenship rights)	정치권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이를 실행한 사람의 비율
	사회권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공민권	무료 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사회적 정치적 관계	의회에 임명된 인종적 소수자의 비율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노동시장에의 포용(Labour market)	유급 일자리에의 접근 가능성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률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
	건강 서비스	공공 1차 의료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Service)	주거 서비스	홈리스의 비율
		공공주택 이용에 필요한 평균 대기 기간
	교육	학교 교육 참가율과 고등 교육 참가율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이용 필요를 가진 사람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

### 32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하위 영역	세부 영역	개념적 지표
	금융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평균 대기 기간(아동 돌봄 포함)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신용거부자의 비율
		금융보조나 상담과 같은 지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
	교통	공공교통체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의 비율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
	공공/문화 서비스	1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1만 명당 공공/문화 시설의 수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Social networks)	이웃 참여	이웃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친교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가족생활	고독감/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친척을 만나는 주기
		가족으로부터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

자료: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pp. 20; 정해식, 2012, pp. 26에서 재인용

####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민자 통합 지표

OECD는 2012년 이래 회원국들의 이민자 통합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유럽연합(EU)과의 협업을 통해 각 국가의 이민자 통합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8년에는 OECD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OECD 비회원국이지만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국가들까지도 포함하여 이민자 통합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a). 2018에 활용된 이민자 통합 지표는 아래 <표 2-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고용, 교육, 주거, 보건, 시민 참여, 사회적 포용 등 6가지 분야, 7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EU, 2018).

이민자 통합 지표는 정책 입안자가 자국의 결과를 타국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를 식별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a). 그러나 각 국가 간 통합정책 영역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서로 가용한 자료 범위가 달라 모든

영역에서 엄밀히 비교하기 어려운 점은 한계로 남았다. 예를 들어, 본 지표는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자 집단을 기본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고용 및 교육 수준에 관한 자료는 해외 출생 인구가 아닌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체류자이기 때문에, 비교가 힘든 점은 한계이다(정기선, 김혜진, 2015, pp. xi-xii).

〈표 2-3〉 2018년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OECD 이민자 통합정책 영역	세부 영역
고용	고용의 질, 노동시장 참여율, 여성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등
교육	이민자 자녀의 교육 수준, 이민자의 교육 수준, 수용국의 언어 구사 능력 등
주거	주거 밀도,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 수 등
보건	주관적 건강 인식, 의료 욕구 충족도 등
시민 참여	선거 참여율, 국적 취득률, 정당 참여, 노조 참여 등
사회적 포용	소속감, 인지한 차별 보고(self-reported discrimination),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

자료: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pean Union(EU)(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pp. 1~32)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함,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Union, Brussel.

## 다. 국외에서 개발된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정

이민(자)과 관련된 사회적 포용 척도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종합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등의 국제 비교 지표들이 있다(Dennison and Dražanová, 2018).

우선 유로바로미터 조사는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럽의

### 34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사회 문제와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Dennison and Dražanová, 2018). 본 조사는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가입 후보 국가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유럽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거주하는 이민자들도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b). 아래 <표 2-4>에 제시된 문항은, 2003년에 이민자 및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안상수, 민문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표 2-3>을 활용한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지만, 응답자 중 약 40%는 비유럽 출신 이민자의 증가를 자국 내 주요한 사회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b).

<표 2-4> 2003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 관련 문항들

주요 영역	문항들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감	어느 사회이든 다른 인종, 종교, 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다양성(인종, 종교, 문화적 측면)이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계 인식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민자 및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욱 발생하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반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 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 이민자 본국 송환 정책 지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주한 국가의 관습과 법에 대한 이민자의 순응 요구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모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민자 및 사회적 소수자는 일부다처제나 여성 할례와 같은 종교적 혹은 문화적 관습을 포기해야만 한다

자료: Coenders, Lubbers and Scheepers(2003).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p. 4-5. 오계택. (200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식. 노동리뷰. pp. 59-68. 종합하여 인용

다음으로 유럽 사회 조사는 유럽인의 태도, 신념 및 다양한 인구의 행동 유형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상수 외, 2012, p. 41). 본 조사의 결과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해 보면, 유럽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우호적으로 변하였지만, 이민자의 인종·민족에 따라 엄연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Heath and Richards, 2016). 구체적으로 유럽인들은 유럽연합 내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유럽 외의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Heath and Richards, 2016). 아래 <표 2-5>는 제1차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이다.

<표 2-5> 유럽 사회 조사에서 관련 문항들

주요 영역	문항들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이민자들의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
	유럽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을 허용해야 한다
	유럽연합 밖에서 온 저개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허용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송환 정책 지지 여부	이민자가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
	이민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
인식된 집단적 민족 위협	이민자들은 직업을 빼앗는다고 보는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고 보는가?
	세금과 서비스: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가?
	나라의 경제에 이민자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가 아니면 나쁘다고 보는가?
	이민자들로 인해 국가의 문화적 생활이 악화되는가 아니면 풍요롭게 되는가?
	이민자들은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가 아니면 살기 나쁜 국가로 만드는가?
	이민자들은 국가의 범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가 아니면 경감시키는가?
인종별 거리 선호도	당신의 상사가 다수 집단과 같은 민족·인종인 이민자인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꺼리는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 다수 집단과 같은 민족·인종인 이민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꺼리는가?

### 36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주요 영역	문항들
	당신의 상사가 다수 집단과 다른 민족·인종인 이민자인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꺼리는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 다수 집단과 다른 민족·인종인 이민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꺼리는가?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	사회 구성원 거의 모두가 같은 관습과 전통을 공유한다면, 국가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면 좋을 것이다
난민에 대한 거부감	비호신청자는 난민 신청 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 건이 진행되는 동안 비호신청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 지위를 획득한 자에게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본국에서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자료: 유럽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모니터링 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pp. 9-10.

### 라. 은재호·송정안(2017)의 사회적 포용 척도

은재호, 송정안(2017)은 한국인의 국민통합 정도를 측정하고자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으로 구성된 국민통합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포용 지표는 고용, 복지, 소득, 젠더, 세대 5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은재호, 송정안 2017). 고용 영역은 전체 일자리에서 임시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인 임시직 근로 비율과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되지 않았으면서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비율인 전체 실업률의 평균으로 측정한다(은재호, 송정안 2017). 복지 영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과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로 측정한다. 소득 영역은 지니계수(gini index)를 통해 개인 혹은 가계들 간 소득이 배분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은재호, 송정안 2017). 젠더 영역은 남성 임금 중위값(median) 대비 남성과 여성 임금 중위값의 차이 비율을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측정한다(은재호, 송

정안 2017). 세대 영역은 청년 실업률, 노인 부양 부담률과 노인 빈곤율을 통해 측정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청년 경제활동 인구 대비 비고용 청년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며, 노인 부양 부담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64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빈곤을 겪는 노인 비율로 측정한다(은재호, 송정안 2017).

〈표 2-6〉 국민통합의 사회적 포용 하위 영역과 측정 지표

Maesen과 Walker의 사회적 포용 척도 영역	측정 지표
고용	임시직(temporary) 근로 비율(%)
	실업률
복지	공공복지지출(GDP 대비 비율)
	공공의료비지출(GDP 대비 비율)
소득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젠더	남녀 임금 격차
세대	청년 실업률
	노인 부양 부담률
	노인 빈곤율

자료: 은재호, 송정안(2017). .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 p. 54

위의 측정 지표를 바탕으로 은재호와 송정안(2017)은 한국과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국민통합 지표에서 사회적 포용 지수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사회적 포용'의 고용, 복지, 소득, 젠더, 세대라는 5가지 영역 중 복지, 젠더, 세대 영역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은재호, 송정안, 2017). 특히 젠더와 복지 영역이 가장 낮은 사회적 포용 양상을 드러냈다(은재호, 송정안, 2017). 구체적으로 복지 지표에서, 한국의 공공복지인 공공복지지출과 공공의료비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았으며, 이는 사회적 포용,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임이 드러났다(은재호, 송정안, 2017). 또 젠더 지표에서는 한국

이 OECD 국가들 중 남녀 임금 차이가 30%로 가장 크게 나타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은재호, 송정안, 2017). 물론, 젠더 영역의 지표로 남녀 소득 격차만을 보여 주었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한국에서 남녀 소득 격차는 지속된 문제이자 사회적 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의 소득과 고용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혹은 평균 이상의 사회적 포용 정도를 나타냈다(은재호, 송정안, 2017).

#### 마. 국내에서 개발된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정

국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된 주된 개념으로는 사회적 거리감, 종족 배제 주의, 국민 정체성, 보편적 권리 수용 및 다문화 수용성 등이 있다(안상수 외, 2012).

우선,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명진, 최유정, 최샬별(2010)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보가더스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반면, 서아시아인을 가장 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외국인 중 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것, 이웃이 되는 것,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은 반면, 일본인이 한국에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가장 높았다(양순미, 2018).

다음으로, 종족 배제 주의 및 국민 정체성을 통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국민 정체성이 한국인이 타자를 수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인진, 송

영호, 2011; 장승진, 2010). 대표적으로 윤인진, 송영호(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국민 정체성의 인식에 있어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혼합형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국민 정체성의 국민 자격 요인 중 종족적 요인인 출생, 한국 국적 소지, 장기 거주, 혈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반면, 시민적 요인인 한국 제도와 법 존중, 언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09; 윤인진, 송영호, 2011; 장승진, 2010).

또 보편적 권리 수용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황정미(2010)의 연구에서는 내국인이 단일 민족주의가 강할수록 이민자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승진(2010, p. 98)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은 한국인들과 같이 보편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완전한 한국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득 수준 및 직업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 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민자들과 일자리의 배분을 두고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보다 이민자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관련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Vedlitz and Zahran, 2007). 또 학력, 즉 교육 수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인진, 송영호, 2011; Ward and Masgoret, 2008). 그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타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낮추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Vedlitz and Zahran, 2007). 그리고 이민자와의 접촉은 내국인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나 해외 체류 및 거주 경험 등으로 이민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완화되고,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았다(김경근, 황여정, 2012).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자와의 접촉 빈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촉 빈도가 높더라도 내국인이 이민자와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접촉이 많으면 오히려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요인과 척도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특징을 바탕으로 내국인과 이민자가 각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적 과정이자 결과로 보았다. 또한, 이민(자)과 관련된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과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이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의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제4장에서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요 변인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용 척도 부분에서는, 현재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소수의 척도는 존재하지만 이민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응답자의 이민(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 개별 도구들이 다수 활용되었다. 이는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포용 척도 및 지표 개발이 부진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척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탐색적 연구이자 기초연구로서,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 제 3 장

##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제1절 국내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제2절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3

##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 제1절 국내의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

#### 1. 지역주민 대상 인식 개선 정책 및 교육

현재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는 제2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 다문화 자료실을 1개 이상 개관하고 다문화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정명주, 최무현, 황민철, 허거훈, 2018, p. 47). 또 서울시에서는 글로벌 빌리지 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 서울 글로벌 센터 등 총 42개의 이민자 지원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정명주 외, 2018, p. 47).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정명주 외, 2018, p. 47).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표 3-1>과 같이 다양하다(임동진, 강정향, 송민혜, 유민이, 박관태, 2018).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일반 국민,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국인과 이민자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쌓아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일반 국민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초중고 정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특히 활동 위주가 많아 ‘활동과 인식 개선과의 연관성이 낮아 인식 개선이라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임동진 외, 2018, p. 239). 또 <표 3-1>에서 제시된 ‘다가감’과 ‘세계시민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으로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임동진 외, 2018, p. 239).

<표 3-1> 일반 국민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별 비교

프로그램명	기관명	세부 대상	교육 과정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다문화 이해 교육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일반 성인, 공무원, 청소년 교육자, 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직장인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 차별 줄이기	강의/ 온라인 위주
다문화 감수성 교육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교사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 다문화감수성 제고	강의/ 부분 활동
다문화 이해 교육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유아, 아동, 청소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전환 편견 해소	(온라인) 강의
다양한국 만들기	세이브 더칠드런	초등학생	다양성 인정 차별, 편견 줄이기 문화 감수성 함양	활동 위주
세계시민 교육	교육부·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이와 다양성 인정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력 강조	활동 위주
다가감	무지개 청소년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다양성(인식, 관용, 수용) 보편(성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활동 위주
다문화 감수성 교육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생(3~6학년), 중학생(1~2학년), 고등학생(1학년)	다양성(인식, 수용) 관계성(공감, 소통) 보편성(인권, 평등)	활동 위주

자료: 임동진 외(2018).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연구’ 일부 수정하여 인용, p.74.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top-down)인 특징이 있다(김기영, 고은선, 2018). 현재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10여개로 산발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인데, 부처마다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 콘텐츠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의 목표 또한 다르다(이혜진, 2019; 전재영, 2011).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0년에 한 의원이 전반적인 다문화 정책을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전재영, 2011). 이처럼 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은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각 학교 혹은 학급의 이주 배경 학생들의 구성 및 욕구에 맞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김숙정, 2018).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동화주의적 특성이 있다(김태형, 2017; 우라미, 황지현, 서경혜, 2018). 전국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프로그램은 54.4%로 가장 많았고, 한국 문화 체험이 16.1%, 문화 다양성 증진이 14.4%, 한국인 대상 문화 체험이 5.4%, 결혼이민자 모국 향수 해소가 2.1% 등의 순이었다(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그러나 이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 교육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경계를 강화하며, 이민자의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보다 주변화된 위치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있다(Banks, 1994). 또 동화주의적 접근은 소수 집단이 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소수 집단 문화가 주류 집단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우라미 외, 2018, p. 62).

##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도입된 배경은 2003년 1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7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명정, 송성민, 2018; 홍관표, 2013). 해당 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06년 7월에 비로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5일 국무총리에게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후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홍관표, 2013; 홍성수, 2017). 차별금지법은 17대에서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20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다(설동훈, 2017; 홍성수, 2017).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헌법, 1988).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엄연히 존재한다(홍성수, 2019). 그러나 이러한 개별 금지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홍관표, 2013).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 국가인권위법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어, 차별 문제를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홍성수, 2019). 마지막으로 국제 인권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홍성수,

2019). 예를 들어, 국제기구인 유엔의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아동권리위원회(CRC) 등에서 한국에서 인종차별 정서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홍성수, 2019).

〈표 3-2〉 차별금지법안 추진 경과

법안명	성안/발의 일시	비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약칭: 인권위 법안)	2006. 7. 25.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추진기획단 차별금지법안	2007. 7. 4.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약칭: 법무부 법안)	2007. 12. 12. (17대 국회)	정부 발의
차별금지법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약칭: 노회찬 법안)	2008. 1. 28. (17대 국회)	시민단체 안 반영 회기 만료 폐기
법무부 차별금지법(등등대우법)안	2010. 12.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내부 논의안(비공개)
차별금지기본법안(박은수 의원 등 11인) (약칭: 박은수 법안)	2011. 9. 15. (18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등 10인) (약칭: 권영길 법안)	2011. 12. 2. (18대 국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 반영 회기 만료 폐기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등 10인) (약칭: 김재연 법안)	2012. 11. 6. (19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법무부 차별금지법(등등대우법)안	2013.	내부 논의안(비공개)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등 12인) (약칭: 최원식 법안)	2013. 2. 20. (19대 국회)	철회 (2013. 4. 24.)
차별금지법안(김한길 의원 등 51인) (약칭: 김한길 법안)	2013. 2. 12. (19대 국회)	철회 (2013. 4. 24.)

자료: 홍성수(2017).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pp. 151-15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차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된 19가지 사유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고용 형태를 포함하였다(안진, 2018; 홍관표, 2013). 여기에는 현재의 국가인권위법이 담지 못하는 괴롭힘, 차별의 지시나 조장 또는 보복 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이지현, 2014, p. 108). 또 고용, 거래, 교육이라는 금지 영역을 일일이 열거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이나 법원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판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준일, 2017).

## 제2절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본 절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이민자를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여러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 법안을 단일화한 2010년 평등법을 통해 영국 사회 내 차별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특히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의 양방향적 포용적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사회통합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

영국은 개별 차별 관련 법안을 수정 및 통합하고,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 이행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2010년 10월 1일 평등법을 새롭게 제정

하였다(심재진, 2015). 2010년 평등법은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영국의 차별금지법 아니라 인권 보호, 나아가 포용정책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 가. 주요 내용

2010년 평등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116개가 넘는 개별 법 및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별 관련 법안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 n.d.a ).<sup>1)</sup> 또한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 기존 여러 법률 간 해석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 혹은 충돌을 해소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미영, 2011). 법률이 보호하는 모든 속성은 크게 9개로 보았다(Legislation, n.d /EHRC, n.d.a.).

- 연령(Age)
- 장애(Disability)
- 성전환(Gender Reassignment)
- 결혼 및 시민동반자관계(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sup>2)</sup>

1) 새롭게 통합된 기존 법률은 다음과 같다.

-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1970)
- 성차별금지법(the Sex Discrimination Act 1975)
- 인종관계법(the Race Relations Act 1976)
- 장애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 고용평등(종교 혹은 신념)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 고용평등(성적 지향성)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3)
- 고용평등(연령) 규정(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평등법, 파트 2(the Equality Act 2006, Part 2)
- 평등(성적 지향성) 규정(the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2007)

2)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커플과 동등한 법적, 경제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10월 영국 대법원의 판결

- 임신 및 모성(Pregnancy and Maternity)
- 인종(Race)
- 종교 및 신념(Religion and Belief)
- 성별(Sex)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또 2010년 평등법은 다음과 같이 금지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ACAS], 2019). 이처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단 일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법 실행에 명확성을 더하고자 하였다(홍성수, 2011).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차별,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조정 의무 미 이행, 괴롭힘,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적 불이익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차별(discrimination)은 평등법에서 가장 방대하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이다. 차별은 직접차별, 복합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성전환으로 인한 차별, 임신 및 모성과 관련한 차별, 간접차별로 나뉜다. 이 중 복합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성전환으로 인한 차별, 임신 및 모성과 관련한 차별은 위에 명시한 보호하는 모든 속성에 근거하여 차별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은 보호하는 모든 속성에 대한 차별의 형태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직접차별(ordinary direct discrimination)은 본인이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친구, 가족 혹은 동료 등 관계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하는 모든 속성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direct discrimination by association)를 포함한다. 또한,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은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 관행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

로, 이 개념은 동성 커플뿐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확장되었다(BBC, 2018).

라 하더라도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관상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에서 차별로 여겨진다. 이러한 간접차별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극히 일부의 경우만이 간접차별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간접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규정, 기준, 관행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EHRC, n.d.b / Words and terms used in the Equality Act). 하지만 이러한 정당화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가정 혹은 인식(실제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하에 차별을 당하는 오인차별(direct discrimination by perception)이 있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조정 의무는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직장, 주거,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모임 및 단체 활동의 영역에 적용된다(Citizens Advice, n.d.a. / Dut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eople). 또한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바꾸는 것, 별도의 추가적 서비스나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셋째, 괴롭힘(harassment)이 있다. 괴롭힘은 보호하는 모든 속성과 관련되거나 ‘성적인 성격’의 원하지 않는 행위(unwanted conduct),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거나 효과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ACAS, 2019). 따돌림이나 위협과 같은 행위뿐 아니라, 농담이나 소문내기,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이나 언급 등도 포함된다(ACAS, 2019).

넷째,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적 불이익(victimisation)도 있다. 보복적 불이익은 보호하는 모든 속성에 근거하여 받은 차별에 항의하는 행위, 혹은 차별에 항의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Citizens Advice, n.d.b. / Victimisation).. 특히 본인이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다(Citizens Advice, n.d.b. / Victimisation).

## 나. 영국의 평등법과 사회적 포용

2010년 평등법은 평등법 제149조를 통해 공적 영역의 평등의무(PSE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를 강조하였다(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1). 평등의무는 영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 업무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서 기관 내 평등, 다양성 및 포용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EHRC, n.d.d. / General Duty FAQs). 첫째,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종사자는 차별, 괴롭힘, 보복 및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근절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기회의 평등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보호하는 모든 속성을 가진 사람들 간 우호적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적 영역의 평등의무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이며, 공적 기관이나 종사자는 이를 정책 결정에 고려해야 한다(EHRC, n.d.c. /EHRC Public Sector Equality Duty, 2019). 또한 구체적으로 이들의 행동뿐 아니라 광고나 홍보,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 정보 및 시설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평등법에 의거하여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EHRC, n.d.d. / General Duty FAQs).

위와 같은 의무 준수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등의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혹은 원칙을 세우고, 4년마다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발표할 의무가 있다(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1). 대표적으로 영국 자선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부 주무부처인 자선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2019)는 최근 '다양성과 포용 전략(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y) 2019-2023'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NHS)에서도 평등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관 내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추진 전략들을 여러 문서에서 밝힌 바 있다(NHS Equality and Diversity Council, 2017).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들도 평등, 다양성, 포용정책(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Policy)을 발표하고, 단순히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행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Nottingham Trent University, 2015). 이 밖에도 영국의 평등 및 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 교육, 형법 정의(Criminal Justice), 보건 등의 분야에서 공적 영역 평등의무의 구체적인 사례(case studi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적 포용, 경제적 이익, 서비스 접근 향상 등 평등의무가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캐나다의 지역사회 기반 이민자 통합프로그램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이주전망 보고서(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28만 6천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2016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1%가 외국 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 (OECD, 2019). 이러한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이민자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민자 대상 포용적 사회통합정책에 관심을 쏟아 왔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양방향 프로세스(two-way street)로 보고 있다(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 2010). 이민자 관련 대표적 관련 법안인 2001년 이민자 및 난민 보호법(IRPA: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역시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은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 모두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s)”로 규정하고 있다(CIC, 2010). 이는 단순히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이민자는 캐나다의 가치, 관습,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캐나다 사회는 이민자의 다양한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양방향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CIC, 2010).

2008년에 캐나다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이러한 양방향 사회통합정책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이민자의 욕구에 좀 더 면밀히 대응하고, 그들의 중장기적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재편을 꾀하는 현대화 노선(modernized approach)을 추진하였다(CIC, 2010). 이에 따라 기존 캐나다 이민부의 정착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세부 주제로 재편되었다(CIC, 2010).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 언어 및 기술 향상,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구 파악 및 타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었다(CIC, 2010). 지역사회 연계(Community Connections)는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정착 상담원(Settlement Worker)<sup>3)</sup>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민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적합한 기관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Glass & Sheffield, 2008).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인 ‘지역이민협의체(LIPs: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를 설립·운영하고 있다(Burr, 2011; Prince, 2019).

### 가. 주요 내용

지역이민협의체는 캐나다 이민부의 지원하에 2008년 온타리오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전역에 80개 이상이 있다(CLIP: Calgary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n.d. / Welcome to Calgary). 지역이민협의체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주최자’의 역할을 하며, 이민자 당사자를 포함해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IC,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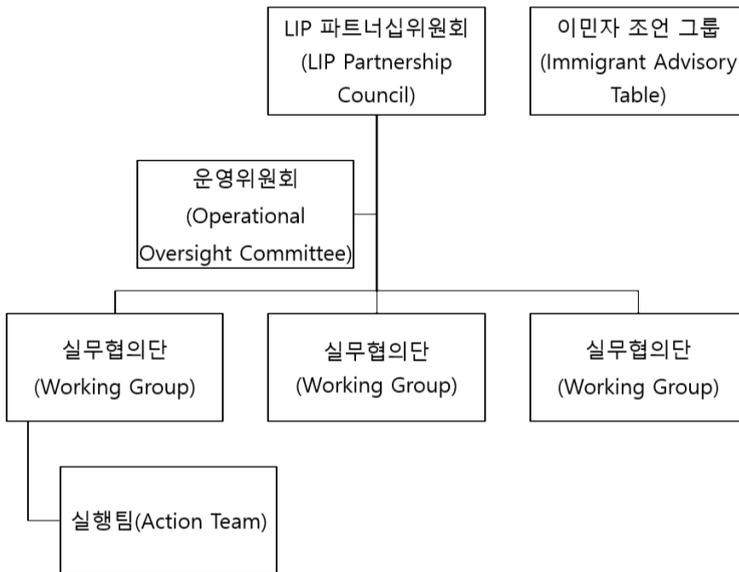
지역이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Prince, 2019). 첫째,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자 관련 정착 서비스 및 일반 국민 대상 캐나다 사회의 공공부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둘째, 시 정부, 지역사회, 공공기관, 고용주 등 이민자 정착의 새로운 당사자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셋째,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기존 캐나다 공공부조 서비스가

3) 정착 상담원은 캐나다 사회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 정착을 돕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지역사회 이민자 관련 단체에서 일하기도 하며, 공공장소(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이민자에게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취약계층(난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의 조정을 돕는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의 욕구가 지역사회 개발계획 과정에 통합되도록 하며, 개별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민자들의 보다 나은 포용적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CLIP, n.d.).

위에 언급한 대로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자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마다 조직 구성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다(Cape Breton Partnership, 2017).

[그림 3-1] 지역이민협의체(LIPs) 조직 구성



첫째, 지역이민협의체는 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된 LIP 파트너십위원회(LIP Partnership Council)를 가지고 있다. 지역이민협의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정착 지원 기관, 지방·주·연방 정부, 학교, 고용시장 관계자, 이민자, 병원 및 의료 종사자, 대학, 시민사회단체, 민간 영역 대표, 경찰, 인종 및 종교 단체들, 미디어 등 다양한 단체가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CIC, 2014). 이 밖에 주거 단체, 여성 단체,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노인 단체, 개인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은 지역이민협의체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LIP 파트너십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Prince, 2019). 전략계획에는 지역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인구학적·지리적 정보와 비전, 의제 간 우선순위, 구체적인 실행계획, 주요 활동 및 파트너, 예산, 기대하는 결과,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rince, 2019).

둘째, 운영위원회(Operational Oversight Committee)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후에 기술될 산하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산하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단과 LIP 파트너십위원회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CLIP, n.d.).

셋째, 이민자의 건강, 이주 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정착과 같은 특별 주제에 관한 산하 위원회 혹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들이 있다(Prince, 2019).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실무협의단이 운영된다. 이러한 실무협의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제출한다.

넷째, 실무협의단 산하에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팀(Action Team)이 있다(Prince, 2019).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이민협의체에서는 이민자의 요구 파악,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 등에 이민자 조언 그룹(IAT: Immigrant Advisory Table)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협의체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 이민 기간, 사회 계층,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민 계층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민자 조언 그룹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별 이민자들이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이민자 조언 그룹은 조금 더 조직화된 이민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Immigrant Advisory Table, 2018).

#### 나. 지역이민협의체(LIPs)에 대한 평가

지역이민협의체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기존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의체 내 다양한 주체 간 정보 공유,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CIC, 2014). 실제로, 캐나다 이민부에서 행한 2016년 평가에서 86%의 협의체 내의 협력이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CIC, 2017). 예를 들어 윈저-에식스(Windsor-Essex)<sup>4)</sup> 협의체의 경우, 이민자 정착 관련 기관과 캐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민자 관련 서비스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CIC, 2014). 이는 이민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4) 윈저(Windsor)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식스(Essex)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이다.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증대하여 이민자의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이민자 및 관련 이슈에 무관심했던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CIC, 2017). 협의체는 산업인 연합(employer councils)이나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와 같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기관의 참여를 증진하고, 이들 기관이 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CIC, 2014). 많은 지역에서 고용주-노동자 매칭 시스템이나 이민자와 고용주를 위한 지침서 제작 등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통적 이민자 지원 기관이 아닌, 지역 고용 및 산업 관련 종사자의 지역이민협의체 참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 이들의 주류 사회 통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성을 더해 간다.

셋째,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 주류 사회의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체는 캐나다의 양방향 사회통합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일방적 사회 '적응'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의 인식 변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대다수 협의체는 이에 관한 구체적 활동 등을 전략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주류 사회(host society)'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류 사회의 참여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우선순위로 삼았다(Prince, 2019). 이 결과, 이민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미디어 보도, 지역사회 내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관찰되었다.

넷째, 이민자의 목소리를 사회통합 관련 논의 및 정책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다. 캐나다 이민부(CIC, 2014, p. 13)는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자 관련 정책의 우선 의제를 정하는 논의의 최전방에 이민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였고, 예산 지원 주체가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욕구를 인식하도록 돕는다”<sup>5)</sup>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민자의 목소리는 지역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크(York) 지역의 경우 비영리 기관에 대한 예산 정책 결정 시 지역이민협의체에서 수립된 전략을 반영하였다(CIC, 2014). 오타와(Ottawa)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공모전 심사 시, 협의체에서 수립한 전략을 기준으로 삼아 얼마나 이민자에 대한 고려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는지 심사한 바 있다(CIC, 2014).

위와 같은 장점에도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가장 큰 한계점은 “모범적인 이민자(desirable immigrants)”와 소위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민자 간 목소리의 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민자 조연 그룹이나 LIP 파트너십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이민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난민이나 장애를 가진 이민자, 여성, 성적 소수 성향을 지닌 이민자 등과 같은 그룹의 의견과 시각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Chuong & Rashid, 2015; Pero, 2017). 따라서 의사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현재 지역이민협의체에 요구되는 구조나 펀딩 요건이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모두를 고려하는 일은 지역이민협의체의 과제로 남아 있다(CIC, 2017).

---

5) “LIPs contribute to bringing the immigrant lens to the forefront of discussions on priorities in a wide range of sectors, and ensure that funders are well aware of needs when establishing guidelines and making decisions”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포용 관련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 대상 인식 개선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고, 국외 사례로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영국은 장애, 연령, 종교나 신념과 같은 개별 영역에 대한 차별 관련 법을 2010년 평등법으로 단일화하였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서 9가지 보호되는 속성 및 차별 유형을 분명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반면, 한국은 2007년 처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한 이래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여전히 성별이나 연령, 장애에 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이에 대해 여러 평가가 존재하지만, 여러 법체계상 불일치로 인해 법적 갈등뿐만 아니라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심재진, 2015; 홍성수, 2011).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법적 갈등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평등법은 공적 영역의 평등의무를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Fell & Dyban, 2017). 이에 근거하여 영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역에서는 이를 반영한 다양성 및 포용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의무는 기존의 인종, 장애, 젠더 평등의무를 새롭게 대체한 것으로, 기존 평등의무 간 조화를 꾀하고 이를 평등법하에 보호되는 속성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EHRC, n.d.c. /Public Sector Equality Duty). 물론, 한국도 이민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및 관련 정책 근거의 부재 등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의 평등법 사례는 이러한 한국의 포용정책 추진과 맞물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는 2008년 온타리오주에 처음 설립된 이래, 캐나다 전역 80개 이상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이민협의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민자를 환영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내국인 대상 인식 개선 정책 및 제도는 또한, 이민자의 문화는 내국인의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개선’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자와 관련된 의제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내국인과 이민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호혜적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또한 향후 이민자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의 경험과 교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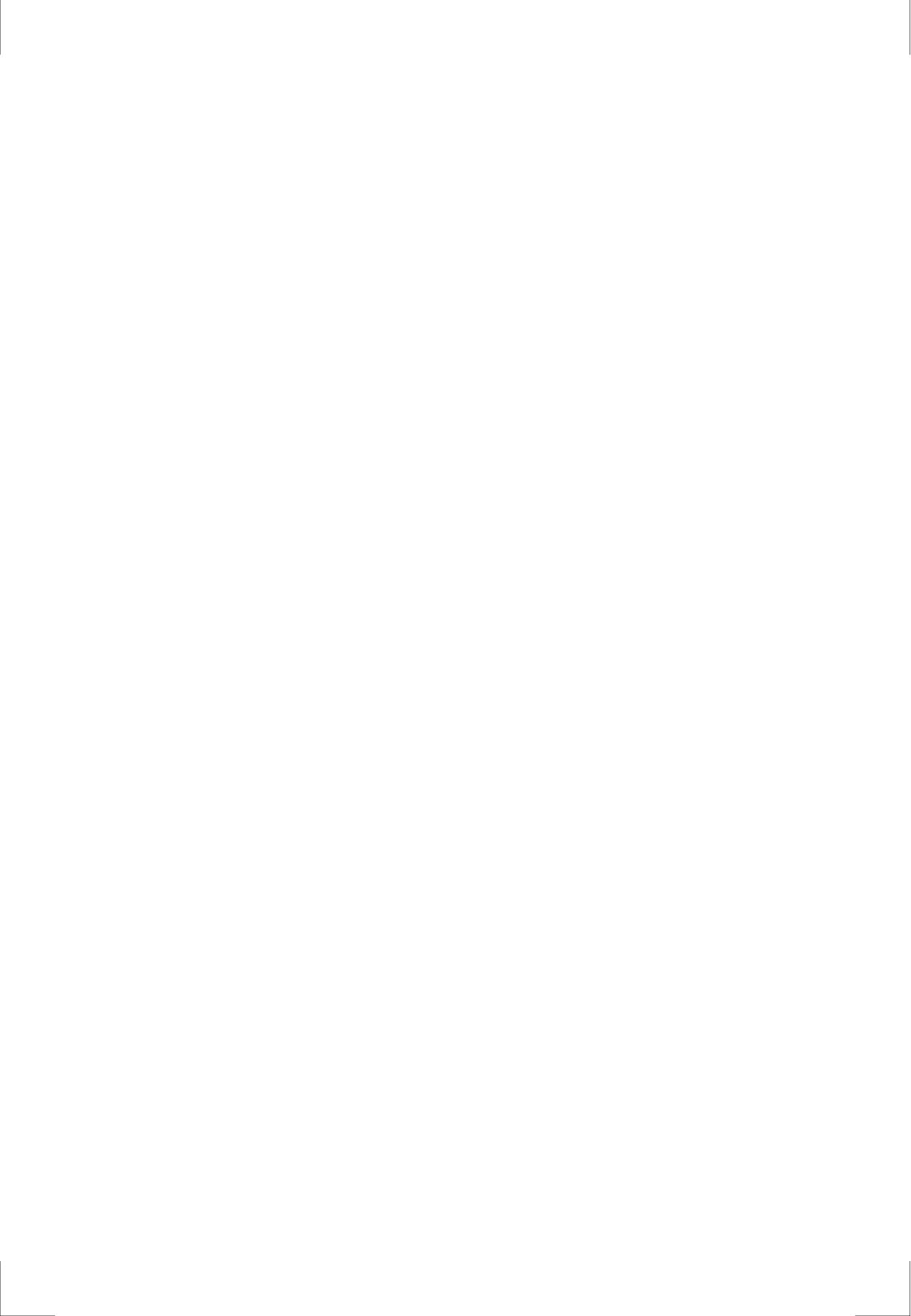
# 제 4 장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제1절 연구 방법

제2절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제3절 소결



# 4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

### 제1절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본 조사는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 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 보장 부문 등 전체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본 조사는 2011년 최초 실시된 이래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4년 현지조사는 9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7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현지조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현지조사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간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2. 주요 분석 변수

### 가.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어떤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포용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표 4-1〉 참조). 그러나 본 조사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이들은 국내 거주 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 고숙련 및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광범위한 집단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 및 세부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사회활동, 시민 의식 중요도, 사회적 지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esen과 Walker가 개발한 사회적 포용 척도의 하위 영역인 시민권 중 정치권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살펴본 지역이민협의체를 통해 이민자를 환영하고 포용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한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활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 의식 중요도를 선택한 이유는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수용성 중 국민 정체성의 하위 요인인 시민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는 Maesen과 Walker가 개발한 사회적 포용 척도 중 하위 영역인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을 참고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은 이웃 참여, 친교 그리고 가족생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4-1〉 참조).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포용 요인 중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 사회보장 부문은 국민건강보험, 개인 의료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였으나, 2014, 2016, 2018년 요인분석 결과 요인으로 묶이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만을 본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4-1〉 참조).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맞닿은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문항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4-1〉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활동의 경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불매운동 참여하기’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의식 중요도에 대해서는 ‘선거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타인의 의견 존중’의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타인의 의견 존중’이 제외되었다. 또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명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개인 의료보험 등 다양하였으나, 2014, 2016, 2018년 요인분석 결과 요인으로 묶이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만을 본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병원비, 학비, 공과금 및 집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 중 일

70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부는 2014, 2016, 2018년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묶이지 않기도 하였다.

〈표 4-1〉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주요 변수 설명

구분	설명	
종속변수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정도	
독립 변수	정치사회 활동	㉡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여부
		㉢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 불매운동 참여하기
	시민 의식 중요도	㉨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사회적 지지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2016년 제외)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고용보험
	경제적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 타의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14, 2016년 제외)
		㉾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2016, 2018년 제외)		

자료: 1)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직업(전문 관리, 사무,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 노무, 기타), 교육 수준(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가구소득(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을 선정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자료 분석을 위해 2014, 2016, 2018년에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빈도, 백분율)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을 위해 베리맥스(VE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정도로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2절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

###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에 앞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2>는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가 50.8%이고 여자는 49.2%로 나타나 남자가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2%, 30대가 21.2% 순이었고, 60대는 12.7%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83.4%를 차지하였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는 16.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3%를 차지하였고, 미혼이 26.4%, 이혼이 4.9% 그리고 사별이 4.5%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고졸이 45.5%, 그리고 대졸 이상이 40.9%를 차지하였고 중졸이 7.6%, 그리고 초졸 이하가 6%였다. 또 직업별로는 사무 종사자가 22.2%, 서비스 종사자가 21.5%로 1, 2위를 차지하였고, 판매 종사자는 14.7%로 3위였다. 그리고 군인이 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21.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19.8%,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5.9%로 나타났다.

(표 4-2) 2014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변수		N	%
전체	전체	7500	100.0
성별	남성	3813	50.8
	여성	3687	49.2
연령 대별	20대	1488	19.8
	30대	1589	21.2
	40대	1812	24.2
	50대	1662	22.2
	60대	949	12.7
거주 지역	도시(동부)	6257	83.4
	농어촌(읍·면부)	1243	16.6
혼인 상태별	미혼	1977	26.4
	배우자 있음	4820	64.3
	사별	337	4.5
	이혼	366	4.9
교육 수준	초졸 이하	450	6.0
	중졸	568	7.6
	고졸	3413	45.5
	대졸 이상	3069	40.9
직업별	관리자	278	5.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60	9.0
	사무 종사자	1139	22.2
	서비스 종사자	1104	21.5
	판매 종사자	753	14.7
	농림어업 종사자	346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70	9.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8	3.7
	단순노무 종사자	381	7.4
	군인	19	0.4
월평균 가구 소득별	소득 없음	111	1.7
	100만 원 미만	386	5.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972	14.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309	19.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408	21.3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052	15.9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655	9.9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285	4.3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58	2.4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94	1.4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71	1.1
1000만 원 이상	116	1.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6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4-3>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50.8%, 여성이 49.2%를 차지하여 남성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4%, 50대 22.4%, 30대 20.1%, 20대 19.8% 그리고 60대가 14.3%를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84.3%, 농어촌이 15.7%로 나타나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2%로 가장 많았고, 미혼인 경우가 27.6%, 사별 4% 그리고 이혼이 3.2%였다. 다음으로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인 응답자가 47.6%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졸 이상이 41.2%로 2위를, 중졸이 7.1%로 3위, 그리고 초졸 이하가 4.1%로 4위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 종사자가 22.9%로 1위를, 서비스 종사자가 22.6%로 2위를 차지하였고, 판매 종사자가 15.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1%, 단순노무 종사자가 6.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6.7%, 농림어업 종사자가 5.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4%, 관리자가 3.6%, 군인이 0.2%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을 받는 가구가 22.3%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7.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6.8%,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3.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9.7% 등의 순이었다.

(표 4-3) 2016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변수		N	%
전체	전체	8000	100.0
성별	남성	4067	50.8
	여성	3933	49.2
연령 대별	20대	1582	19.8
	30대	1610	20.1
	40대	1875	23.4
	50대	1793	22.4
	60대	1141	14.3
거주 지역	도시(동부)	6747	84.3
	농어촌(읍·면부)	1253	15.7
혼인 상태별	미혼	2204	27.6
	배우자 있음	5219	65.2
	사별	318	4.0
	이혼	259	3.2
교육 수준	초졸 이하	329	4.1
	중졸	570	7.1
	고졸	3806	47.6
	대졸 이상	3295	41.2
직업별	관리자	204	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9	6.7
	사무 종사자	1296	22.9
	서비스 종사자	1278	22.6
	판매 종사자	897	15.9
	농림어업 종사자	332	5.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5	11.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8	4.4
	단순노무 종사자	389	6.9
	군인	11	0.2
	월평균 가구 소득별	소득 없음	70
100만 원 미만		318	4.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774	9.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347	16.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781	22.3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404	17.6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101	13.8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491	6.1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296	3.7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40	1.8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63	0.8
1000만 원 이상	216	2.7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8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4-4>에 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0.8%, 여성이 49.2%로 남성 응답자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8%, 40대가 22.5%, 20대가 19.7%, 30대가 19.3% 그리고 60대가 15.7%를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84%,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가 16%로, 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5%, 미혼이 28.1%, 사별이 3.5% 그리고 이혼이 2.8%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이 49.7%, 고졸이 41.6%, 중졸 5.6% 그리고 초졸 이하는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 종사자가 29.2%, 서비스 종사자 22.9%, 판매 종사자 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8%, 단순노무 종사자가 4.7%, 농업어업 종사자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20%,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8.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4.8%,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4.5% 등의 순이었다.

(표 4-4) 2018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

변수		N	%
전체	전체	8000	100.0
성별	남성	4067	50.8
	여성	3933	49.2
연령 대별	20대	1577	19.7
	30대	1542	19.3
	40대	1802	22.5
	50대	1824	22.8
	60대	1255	15.7
거주 지역	도시(동부)	6724	84.0
	농어촌(읍·면부)	1276	16.0
혼인 상태별	미혼	2248	28.1
	배우자 있음	5243	65.5
	사별	283	3.5
	이혼	225	2.8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50	3.1
	중졸	447	5.6
	고졸	3329	41.6
	대졸 이상	3975	49.7
직업별	관리자	166	2.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1	4.8
	사무 종사자	1727	29.2
	서비스 종사자	1351	22.9
	판매 종사자	1064	18.0
	농림어업 종사자	248	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99	10.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9	3.2
	단순노무 종사자	276	4.7
	군인	6	0.1
기타	2	0.0	
월평균 가구 소득별	소득 없음	45	0.6
	100만 원 미만	311	3.9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586	7.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182	14.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597	20.0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475	18.4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159	14.5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731	9.1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384	4.8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246	3.1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1	1.3
1000만 원 이상	184	2.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2.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변화

〈표 4-5〉에서는 2014, 2016, 2018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응답한 참여자들이 어떤 유형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사회적 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응답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직장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웃, 절친한 친구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국내 이민 환경이 단순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저숙련 이주 노동자가 전체 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혜순, 2019).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아직도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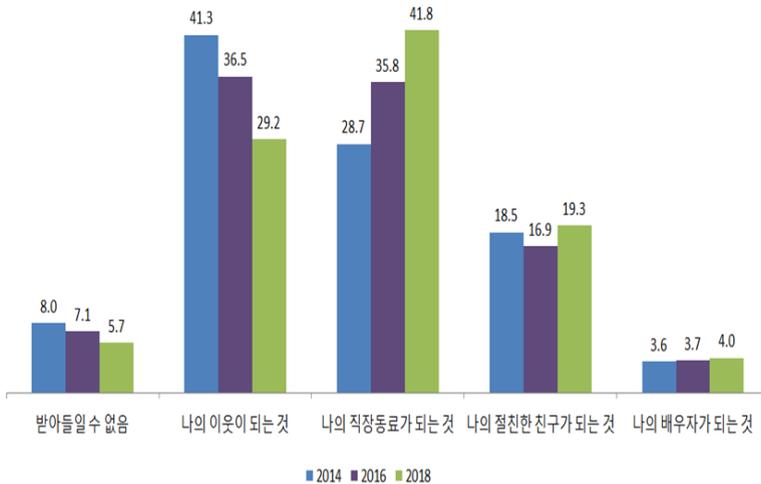
〈표 4-5〉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빈도	%	빈도	%	빈도	%
받아들일 수 없음	598	8.0	571	7.1	457	5.7
나의 이웃이 되는 것	3100	41.3	2917	36.5	2333	29.2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2151	28.7	2866	35.8	3344	41.8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1384	18.5	1352	16.9	1544	19.3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67	3.6	294	3.7	322	4.0
전체	7500	100.0	8000	100.0	8000	100.0

자료: 1)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1]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자료: 1)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특히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4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이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

사, 2013년 세종시 특별 센서스, 2015년 신축 아파트 조사구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2018년 기준, 응답자 중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다시 말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민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도시 거주자는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반면, 읍·면부 거주자는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고 주장한 안상수 외(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이들은 국제결혼 초기부터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 혹은 동남아 지역의 여성들과 이웃 관계로 지낸 기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낮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권역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부산, 인천, 대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물론 아래 〈표 4-6〉을 통해 도농 간의 비교는 힘들지만, 특정 도시 지역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에서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서울은 전체 외국인 주민 중 약 22.8%가 거주하고, 경기도는 전체 이민자의 32.8%가 거주할 정도로, 두 지역 모두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곳이다(법무부, 2019). 위의 결과는 이민자와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이민자를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즉, 본 결과는 이민자와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접촉이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결코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민자와 접촉의 양이 아닌 질적인 접촉의 경험이야말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질적인 접촉은 한국인과 이민자들 간의 단순한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한국인과 이민자들이 함께 관련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의미한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허청아, 그레이스정, 2019, p. 489). 물론, 이민자의 체류 자격, 출신 국적, 인종, 민족, 직업 등 여러 요인들 역시 영향을 주지만(정기선 외, 2016), 내국인과 이민자 간 접촉의 질을 고려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6〉 2018년 권역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류	사회적 포용				F (p)	Scheffe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서울	1566	2.64	.862	14.930 (.000)	b > a, d > a, f > a, b, c, e, g, i, l, i > a, k > a, m > a, n > a, o > a, p > a, l, r > a	
부산	540	2.89	.899			
대구	383	2.83	.803			
인천	465	2.93	.794			
광주	224	2.82	.927			
대전	232	3.30	.880			
울산	183	2.74	.716			
세종	46	2.99	1.007			
경기	2028	2.87	.915			
강원	231	2.94	.865			
충북	241	2.97	1.049			
충남	313	2.70	.925			
전북	268	2.99	.933			
전남	269	3.08	1.122			
경북	399	2.94	.974			
경남	511	3.10	1.030			
제주	99	3.14	1.094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3.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변화

#### 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

##### 1) 2014년

2014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7>에 나타나듯,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적 지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KMO값은 .839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7> 2014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7500)

변수	문항	성분					신뢰도 계수
		1	2	3	4	5	
정치 사회 활동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 여부	.870	.031	-.008	-.017	.063	.926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전달 경험 여부	.863	-.015	-.030	-.003	.067	
	시위·집회 참여 경험 여부	.856	.026	-.009	.016	.025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경험 여부	.853	.014	-.019	-.002	.071	
	불매운동 참여 경험 여부	.789	.000	-.110	.022	.053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여부	.738	.039	-.015	.032	.042	
	서명운동 참여 경험 여부	.670	-.066	-.144	.056	.053	.824

변수	문항	성분					신뢰도 계수
		1	2	3	4	5	
시민의식 중요도	세금 납부 중요도	-.003	.862	.024	-.008	.067	
	법·규칙 준수 중요도	.025	.852	.026	.016	.050	
	투표 참여 중요도	-.015	.640	.039	.020	.060	
	타인의 의견 존중 중요도	.012	.601	.068	-.004	.032	
사회적 지지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055	.078	.825	-.008	.002	.789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059	.014	.671	-.047	.013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090	.014	.671	-.047	.013	
사회보험 가입 여부	보험 및 연금 보유 여부-고용보험	.031	.021	-.047	.944	-.020	.917
	보험 및 연금 보유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	.042	.006	-.045	.893	-.028	
경제적 어려움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공과금 미납 경험	.054	.038	-.001	-.031	.730	.728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돈 빌리거나 대출 경험	.059	.022	-.021	.017	.665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진료 못 받은 경험	.048	.057	.043	-.042	.580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	.055	.057	.009	.014	.549	
KMO(Kaiser-Meyer-Olkin)			.839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uare		74551.720		
			df(p)		190(.00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2) 2016년

2016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8>에 나타나듯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

도’,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어려움’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KMO값이 .805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 2016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8000)

변수	문항	성분					신뢰도 계수
		1	2	3	4	5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고용보험	.994	-.009	.002	.001	.001	.940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	.892	-.001	.009	-.009	.002	
정치 사회 활동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 여부	.045	.834	-.045	.050	-.031	.906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전달 경험 여부	.040	.821	-.087	.027	-.019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경험 여부	.060	.816	-.054	.043	-.031	
	시위·집회 참여 경험 여부	.075	.788	-.044	.067	-.057	
	서명운동 참여 경험 여부	.070	.720	-.110	-.007	.040	
	불매운동 참여 경험 여부	.069	.699	-.072	.025	.016	
시민의식 중요도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여부	.069	.681	.003	.015	-.041	.809
	세금 납부 중요도	-.020	.106	.920	-.052	-.013	
	법·규칙 준수 중요도	.004	.077	.806	-.041	-.032	
사회적 지지	투표 참여 중요도	.017	.029	.611	-.015	.034	.724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016	-.111	.118	.755	-.02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005	-.118	.153	.679	-.024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053	-.115	.065	.575	.026	.620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공과금 미납 경험	-.025	.093	.073	.017	.664	

변수	문항	성분					신뢰도 계수
		1	2	3	4	5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음	-.010	.145	.026	.000	.586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040	.095	.020	.066	.512	
KMO(Kaiser-Meyer-Olkin)		.805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uare		64705.691			
		df(p)		153(.00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3) 2018년

2018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이 총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사회적 지지', '경제적 어려움' 등 5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KMO값은 .81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9〉 2018년 사회적 포용 요인분석(n=8000)

변수	문항	성분					신뢰도 계수
		1	2	3	4	5	
정치 사회 활동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경험 여부	.811	.015	.012	-.035	.125	.896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 여부	.805	.032	.009	-.007	.091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전달 경험 여부	.771	-.024	-.003	-.062	.094	
	시위·집회 참여 경험 여부	.715	-.024	.027	-.086	.057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경험 여부	.704	.034	.037	-.035	.065	
	서명운동 참여 경험 여부	.703	-.065	.052	-.098	.114	
	불매운동 참여 경험 여부	.702	-.051	.038	-.067	.046	
시민의 식 중요도	세금 납부 중요도	-.025	.867	-.011	-.029	.004	.827
	법·규칙 준수 중요도	-.010	.811	.012	-.031	.016	
	투표 참여 중요도	-.007	.688	.022	.012	.065	
	타인의 의견 중요도	-.019	.599	.010	-.004	.006	
사회 보험 가입 여부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고용보험	.057	.023	.981	-.048	-.004	.919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	.066	.016	.862	-.031	.000	
사회적 지지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032	-.029	-.003	.842	.009	.74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100	.008	-.025	.686	.00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103	-.022	-.036	.595	.067	
경제적 어려움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037	.002	.007	.038	.610	.649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공과금 미납 경험	.095	.030	-.038	.009	.576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음	.144	.020	-.016	-.012	.557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타의에 의한 실업 경험	.064	.025	.040	.037	.538	
KMO(Kaiser-Meyer-Olkin)		.816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uare		64743.022			
		df(p)		190(.00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나. 요인분석을 통한 회귀분석

개별 요인의 효과를 좀 더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위의 요인분석으로 얻은 요인들을 기준으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표 4-10>은 그 결과이다.

우선, 2014년에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가지 요인 중, 총 3개 요인인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와 ‘사회적 지지’가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구체적으로, 시민의식 중요도와 사회적 지지 모두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치사회활동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그리고 거주지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0〉 2014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모형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adj. $R^2$ )
		B	SE	$\beta$			
독립 변수	(상수)	2.854	.075		38.309	.000	.044 (.041)
	정치사회활동	-.089	.014	-.090	-6.257	.000	
	시민의식 중요도	.110	.016	.103	7.055	.000	
	사회적 지지	.110	.016	.102	6.959	.000	
	사회보험 가입 여부	.018	.015	.019	1.231	.218	
	경제적 어려움	-.031	.017	-.027	-1.832	.067	
통제 변수	성별	.118	.030	.059	3.997	.000	
	연령	-.062	.015	-.076	-4.237	.000	
	직업	0	.013	.000	-.006	.995	
	가구소득	.010	.009	.017	1.043	.297	
	교육 수준	-.002	.028	-.002	-.082	.935	
	거주지	-.176	.036	-.076	-4.923	.000	
F=19.445***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6년에는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5가지 요인 중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총 5개 요인 모두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구체적으로, 정치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보험 가입, 시민의식 중요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1〉 2016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모형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adj. $R^2$ )
		B	SE	$\beta$			
독립 변수	(상수)	2.888	.068		42.537	.000	.026 (.024)
	사회보험 가입 여부	-.067	.013	-.068	-4.990	.000	
	정치사회활동	.034	.014	.034	2.493	.013	
	시민의식 중요도	-.028	.013	-.031	-2.166	.030	
	사회적 지지	.094	.015	.085	6.267	.000	
	경제적 어려움	-.042	.017	-.034	-2.506	.012	
통제 변수	성별	.076	.027	.040	2.857	.004	
	연령	-.064	.012	-.084	-5.178	.000	
	직업	.009	.012	.013	.801	.423	
	가구소득	.020	.008	.036	2.415	.016	
	교육 수준	-.038	.026	-.026	-1.444	.149	
	거주지	-.138	.035	-.056	-3.987	.000	
F=13.199***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8년에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가지 요인 중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 4가지 요인이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구체적으로, 시민의식 중요도와 사회적 지지는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사회활동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 중에서는 연령, 직업 그리고 가구소득이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2〉 2018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모형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adj. $R^2$ )
		B	SE	$\beta$			
독립 변수	(상수)	2.887	.068		42.275	.000	.035 (.034)
	정치사회활동	-.093	.013	-.096	-7.308	.000	
	시민의식 중요도	.106	.013	.107	8.166	.000	
	사회보험 가입 여부	-.068	.013	-.074	-5.223	.000	
	사회적 지지	.052	.014	.050	3.794	.000	
	경제적 어려움	-.006	.015	-.005	-.408	.683	
통제 변수	성별	.016	.025	.008	.615	.539	
	연령	-.037	.012	-.050	-3.134	.002	
	직업	.041	.012	.052	3.475	.001	
	교육 수준	.036	.027	.024	1.335	.182	
	가구소득	-.023	.008	-.040	-2.820	.005	
	거주지	-.029	.033	-.012	-.872	.384	
F=19.054***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분석.

###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인은 이민자를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사회적 포용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자를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변동이 있었고,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민자를 공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정도는 커진 반면,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 정도

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13〉 2014, 2016, 2018년 사회적 포용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2014	2016	2018
독립변수	정치사회활동	●	●	●
	시민의식 중요도	●	●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
	사회적 지지	●	●	●
	경제적 어려움		●	
통제 변수	성별	●	●	
	연령	●	●	●
	직업			●
	교육 수준			
	가구소득		●	●
	거주지	●	●	

그중 2014, 2016, 2018년 공통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와 ‘사회적 지지’가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 중에는 연령이 공통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정치사회활동 참여는 2014년과 2018년에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국인

이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을 달리 느끼는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정기선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미국인, 중국 동포인 조선족, 일본인, 동남아인, 중국인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다. 한국 내 체류 중인 이민자의 상당수가 동남아 출신의 저숙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응답자들은 이들과의 잦은 접촉에도 사회적 포용성이 높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사회활동 참여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모국인 친구 모임 및 관련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반면,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정치활동, 민간단체 활동 등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9). 다시 말하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은 한국인과 어울리기보다 모국인 친구모임을 활발히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이선 외, 2019). 또 2018년 응답자들 중 약 절반이 향후 한국인과의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김이선 외, 2019).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인 한국인은 정치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함에도 이민자와 접촉할 확률은 매우 낮아, 이 점이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식 중요도는 2014년과 2018년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흔히 시민의식은 다문화주의와 연관되어 이해되는데, 그 이유는 시민의식이란 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및 생활방식을 지닌 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이다(Kymlicka, 1995). 따라서 시민의식 중요도가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 등 정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은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심리적인 적응을 비롯한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진희, 2012; 유봉애, 옥경희, 2013).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넓혀,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역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과 2018년 사회보험 가입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에 국한되는 것에 비춰 볼 때, 응답자의 고용 상태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내국인의 직업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Scheve and Slaughter, 2001; Vedlitz and Zahran, 2007). 실제로, 한국인들은 점점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추세이다(정기선 외, 2016). 2장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민자들과 일자리의 배분을 두고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집단이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Vedlitz and Zahran,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 빈번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민자가 내국인과의 모임에 적극 참여할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되, 내국인과 이민자 간 접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이민자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 평등법과 같은 관련 법안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대응 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대응 방안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후, 사회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에서는 이민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식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사 및 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10년 넘게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국내 헌법상 평등 원칙과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 인권적 측면에서 본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본 법안은 차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된 19가지

사유와 더불어 성적 지향과 고용 형태를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법안은 현재 개별 금지법들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갈등, 사각지대 발생, 적용상 혼란 등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을 없애고자 하였다.

국외의 포용적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중 영국의 평등법은 2010년 제정되었다.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의 차별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통일하여, 9가지 보호되는 속성 및 차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평등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영국의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기관 내 평등, 다양성 및 포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등의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혹은 원칙을 세우고 4년마다 실행 목표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류를 촉진하고, 동시에 이민자를 주류 사회 내의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지역이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존재한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ㄱ) 기존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의체 내 다양한 주체 간 정보 공유, 상호 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ㄴ) 이민자 및 관련 이슈에 무관심했던 기관들의 참여 증가, ㄷ)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 주류 사회의 태도 변화, ㄹ) 사회통합 관련 논의 및 정책에 이민자의 목소리 반영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이민협의체 내 이민자 간의 목소리 불균형 문제로 인한 비판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양적 연구는 2014, 2016,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를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이민자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2014, 2016, 2018년 공통적으로 ‘정치사회활동’, ‘시민의식 중요도’와 ‘사회적 지지’가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 중에는 연령이 공통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제2절 대응 방안

본 절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제시할 대응 방안 중 일부는 국내외 이민자 포용 관련 정책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미흡하거나 보완 및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대응 방안은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반차별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안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김지혜, 2019; 염형

국, 2017). 더군다나 최근 우리 사회 내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혐오 및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개별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염형국, 2017).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영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 유형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3장에서 살펴본 영국의 평등법과 같이, 한국에서도 평등법에 평등의무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운영에서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평등의무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 및 기타 단체에도 평등의무를 이행할 방안 및 시행 전략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관련 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심재진, 2017).

## 2.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의기구 재정비

둘째,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의기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부산 및 여러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신설했다. 본 대표자회의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로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 이민자의 대변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16년 본 회의가 시작되어 총 8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하였고, 2019년 초 26개국 출신의 이민자 45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2기를 출범하

기도 하였다(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이는 하향식으로 운영되어 온 다문화 및 이민자 관련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련 사업, 조례 및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와 달리, 한국의 대표 자회회는 외국인 주민만을 대상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즉, 외국인을 내국인과 분리하고 이들을 대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시혜적이고도 동정적인 시선과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지역이민협의체와 같이, 이민자와 내국인이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혹은 대표자회회를 꾸려야 할 것이다. 또 캐나다 사례의 한계점에서 나타나듯이, 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황에 있는 이민자들이 협의기구 혹은 대표 자회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단지 정책을 제안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지자체 외국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방식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확대’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등을 정책 과제로 언급한 만큼(법무부, 2018; 여성가족부, 2018), 향후 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의 기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제4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정비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인식 개선 교육

셋째, 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이민자에 대해 수용적이면서도 동시에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이민자와의 결혼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고,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며, 정규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고, 이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부(모)국의 언어 프로그램, 다문화·세계시민·국제이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7).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식 개선 교육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 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교육의 대상자를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정착하게 된 것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 한국인 상당수가 이민자와 교류하고 이들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수준이 부족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훈계 저널리즘적 태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김혜순, 2013, 2019).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아래에 언급할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 4.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류 확대

넷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민자와 내국인의 교류 기회를 늘림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 살펴본바, 내국인과 이민자 간 접촉의 양이 아닌 질이야말로 사회적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국인과 이민자 간 접촉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이민자와 내국인이 조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혹은 다문화 관련 행사들이 있지만, 이는 일회성이거나 지자체 사업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임동진 외, 2018).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원되는 이민자들이 주로 결혼이주여성으로 국한되어, 내국인이 제한된 이민자 집단과 접촉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이남철, 김형만, 이미영, 2012).

그러면 어떻게 내국인과 이민자의 교류를 확대하고 접촉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중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 및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추진 과제는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그리고 문화 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8, p. 32).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영역 혹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용한 자원 및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적극 연계 및 조정하는 방안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세부 추진 과제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체육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교류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잠재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을 이룩하고자 하였다(곽윤경, 양영미, 2017; Gasparini, 2010). 이는 체육 활동 자체가 '세계 공용어로서 인종이나 종교, 계층, 연령, 성과 관련 없이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권민혁, 2008, p. 168).

또 체육활동은 특별한 언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김경숙, 김도연, 주성순, 2009), 다른 인종 및 민족,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를 가진 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들과 동료 간의 연대의식, 소속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곽윤경, 양영미, 2017, p. 152). 또한 내국인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는 이민자의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상호간의 문화 이해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곽윤경, 양영미, 2017, p. 151). 이는 이민자들과 내국인들이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고, 여기서 받은 사회적 지지는 한국인이 이민자를 사회적 포용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4장). 따라서 국내에서는 조기축구회 등을 활용하여 서로 간의 체육 활동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타 자조 모임,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와 취미활동 역시 다문화 교육 못지않게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물론 현재 유사한 모임들이 존재하나, 주체와 객체가 항상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이에 앞선 3장 및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인과 이민자들이 정치사회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자조 모임, 취미활동 모임 등에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면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가산점 혹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공간 대여 및 자금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국인이 이민자를 단순히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 함께 어울리며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가 사회적 포용으로 한발 다가서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척도 개발

다섯째,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척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소기의 목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하다. 이에 척도 개발은 현재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를 면밀하게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척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한다면,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조사 결과는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이규용 외, 2018, pp. 200-201).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곽윤경, 양영미. (2017).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pp. 147-170.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구미영. (2011). 영국평등법개정의 주요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3월호, pp. 80-92.
- 권민혁.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초등체육교육의 방향 및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3), pp. 165-174.
- 길강묵.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pp. 139-168.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pp. 87-117.
- 김경숙, 김도연, 주성순. (2009). 독일 스포츠 다문화 교육의 운영 현황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1), pp. 11-26.
-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pp. 405-425.
- 김명정, 송성민. (2018). 우리나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3), pp. 43-77.
- 김미곤. (2019).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78호, pp. 2-4.
- 김숙정. (2018).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광장*, pp. 56-59.
- 김이선, 최윤정, 윤지소, 이재경, 문희영, 이명진, 양계민. (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달린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경기도 파주시: 창비

- 김진희. (2012).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pp. 209-223.
- 김태형. (2017). 한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 모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pp. 624-633.
- 김혜순. (2013). 이슈와 쟁점: 국가공인 통계인 다문화수용성조사의 문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pp. 275-278
- 김혜순. (2019). 당대 국제이주와 한국의 이민환경에서 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회의 자료(비공개)*.
- 대한민국헌법, 1988.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  
2019.12.13.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 법무부.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pdf].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MDM2OTUI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I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2019.11.07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서울시, 26개국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2기 출범. 서울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78129?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78129?tr_code=snews) 2019.10.10.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 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 설동훈. (2017). 한국 내 이주민의 권리 보장: 동향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 (230), pp. 5-13.
- 심재진. (2015). 영국의 차별금지법 개관.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
- 심재진. (2017).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50, pp. 43-85.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부.
-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부.
- 안진.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 현행 차별금지법 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1), pp. 537-589.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pp. 387-422.
- 양순미. (2018). 농촌 지역민이 인식한 다문화사회 문화접변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75-75.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 염형국. (20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pp. 231-236.
- 오계택. (200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식. 노동리뷰. pp. 59-68.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우라미, 황지현, 서경혜. (2018).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49(2), pp.59-88.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 윤인진, 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857-868.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pp. 143-192.
- 은재호, 송정안. (2017). 제3장: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진단.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pp. 52-123). 서울시: 한국행정연구원
- 은재호. (2019).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성찰. 2019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자료집 -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 pp. 5-25.
- 이규용, 김혜순, 송영훈, 최서리. (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세종시: 한국노동연구원.
- 이남철, 김형만, 이미영. (2012).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서울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pp. 63-85.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pp. 5-34.
- 이준일. (2017).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4(2), pp. 99-121.
- 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회*, 16(3), pp. 107-139.
- 이혜진. (2019). 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2): 259-269.
- 임동진, 강정향, 송민혜, 유민이, 박관태. (2018).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연구. 과천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3), pp. 97-119.
- 전경옥, 김영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화.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연구. 서울시: 문화관광체육부.
- 전재영. (2011). 다문화교육 연구 실태를 통해 본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연구*. 4(2), pp. 17-41.

- 정기선, 김혜진. (2015). 이주민통계 국제비교 현황과 시사점. IOM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시리즈, No. 2015-01. 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 박성일, 박미화, 현리정. (2016).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6-02. 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 최서리. (2014). 해외 외국인력 도입정책과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11, pp. 32~47.
- 정명주, 최무현, 황민철, 허거훈. (2018).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과천시: 법무부.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 서울대학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유진영, 김성아. (20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서울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 200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zMjcZMTk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yMDA4JTI2> 2019.11.07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 2019.11.07.
- 통계청(또는 e-나라지표). (2019). 연도별 체류외국인현황.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

- h.do?idx\_cd=2756&stts\_cd=275601&freq=Y 2019.11.07.
- 한국행정연구원. (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시: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시: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시: 한국행정연구원.
- 허청아, 그레이스 정. (2019). 229개 시군구 이주민 분포 프로파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보건사회연구*, 39(2), pp. 469-499.
- 홍관표. (201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pp. 309-344.
- 홍성수. (2011). 영국의 차별금지법제 연구 - 2010년 평등법을 중심으로. 과천시: 법무부.
- 홍성수. (20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주요 내용과 쟁점 I (총칙).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서울시: 서울대학교.
- 홍성수. (2019).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9, pp. 1-28.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적 관점에서. *아세아 연구*, 제53권 제4호, pp. 152-184.
- Abbotsford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 (2018). *Immigrant Advisory Table - Terms of Re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abbotsfordlip.ca/files/File/AIT/Updated%20Immigrant%20Advisory%20Table%20TOR%2002.26.2018.pdf> 2019.09.10
-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ACAS]. (2019). *Equality and discrimination: understand the basics*. Retrieved from [https://archive.acas.org.uk/media/4267/Equality-and-discrimination-understand-the-basics/pdf/Equality\\_and\\_discrimination\\_understand\\_the\\_basics\\_-\\_July\\_2019.pdf](https://archive.acas.org.uk/media/4267/Equality-and-discrimination-understand-the-basics/pdf/Equality_and_discrimination_understand_the_basics_-_July_2019.pdf) 2019.09.10
- Banks, J. A. (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Massachusetts, United States: Allyn and Bacon Inc.

- BBC. (2018, October 2). *Civil partnerships: Law to change for mixed-sex couple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5714032> 2019.09.24
- Beck, W., van der Maesen, I. & Walker, A. (1997).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 van der Maesen, L., Thomése, G.. & Walker, A. (Eds.)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urr, K. (2011).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Building Welcoming and Inclusive Communities through Multi-Level Governance. *Horizons Policy Research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p2pcanada.ca/files/2011/10/Local-Immigration-Partnerships-Building-Welcoming-and-Inclusive-Communities.pdf> 2019.09.23
- Calgary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CLIP]. (n.d.). *Welcome to Calgary*. Retrieved from <https://www.calgarylip.ca/> 2019.09.10
- Cameron, C.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pp. 396-404 2019.09.10
- Cape Breton Partnership. (2017). Presentation to the Municipality of the County of Inverness. Retrieved from: <https://invernesscounty.ca/wp-content/uploads/2017/12/CB-Partnership-Immigration-Initiatives-Inverness.pdf> 2019.09.10
-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2019). *Diversity and inclusion strategy 2019 to 2023*.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y-commission-diversity-and-inclusion-strategy-2019-to-2023/diversity-and-inclusion-strategy-2019-to-2023#our-diversity-and-inclusion-strategy> 2019.08.26

Chuong, K., & Rashid, F. (2015). *A Review of Reports from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on 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Guelph, ON: Community Engaged Scholarship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atrium.lib.uoguelph.ca/xmlui/bitstream/handle/10214/9215/Chuong\\_etal\\_LIPSettlementAndIntegration\\_2015.pdf?sequence=5&isAllowed=y](https://atrium.lib.uoguelph.ca/xmlui/bitstream/handle/10214/9215/Chuong_etal_LIPSettlementAndIntegration_2015.pdf?sequence=5&isAllowed=y) 2019.08.26.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2010). Evaluation of the Welcoming Communities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reports-statistics/evaluations/welcoming-communities-initiative.html> 2019.08.26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2014).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Outcomes 2008-2013. Retrieved from <http://p2pcanada.ca/files/2014/07/Local-Immigration-Partnerships-Outcomes-2008-2013.pdf> 2019.09.23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2017). Evaluation of the Settlement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documents/pdf/english/evaluation/e2-2016-settlement-en.pdf> 2019.09.22

Citizens Advice. (n.d.a.). *Dut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eople*. Retrieved from <https://www.citizensadvice.org.uk/law-and-courts/discrimination/what-are-the-different-types-of-discrimination/duty-to-make-reasonable-adjustments-for-disabled-people/>

- ke-reasonable-adjustments-for-disabled-people/ 2019.08.27
- Citizens Advice. (n.d.b.). *Victimisation*. Retrieved from <https://www.citizensadvice.org.uk/law-and-courts/discrimination/what-are-the-different-types-of-discrimination/victimisation/> 2019.08.27
- Coenders, M., Lubb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Retrieved from [https://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148-report-1.pdf](https://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148-report-1.pdf) 2019.08.27
- Costa, D. L. & Kahn, M. E. (2003).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Heterogeneity: An Economist's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olitics 1. pp. 103-111. 2019.08.27
- Demireva, N. (2017) *Immigration,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Briefing, Oxford: the Migration Observatory at the University of Oxford
- Dennison, J. & Dražanová, L. (2018) *Public attitudes on migration: rethinking how people perceive migration*. Florence: European Union.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n.d.a.). *An introduction to the Equality Act 2010*. Retrieved from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equality-act-2010/what-equality-act> 2019.08.2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n.d.b.). *Words and terms used in the Equality Act*. Retrieved from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dvice-and-guidance/commonly-used-terms-equal-rights> 2019.08.2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n.d.c.). *Public Sector*

- Equality Duty*. Retrieved from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dvice-and-guidance/public-sector-equality-duty> 2019.08.2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n.d.d.). *General Duty FAQs*. Retrieved from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advice-and-guidance-faq/general-duty-faqs-gb> 2019.08.27
-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Austria Racism and Xenophobia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pp. 9-10. 2019.08.27
- European Commission. (2018a). *Settling In 2018 - a joint EU-OECD report on integration of migrants*.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home-affairs/news/settling-2018-joint-eu-oecd-report-integration-migrants\\_en](https://ec.europa.eu/home-affairs/news/settling-2018-joint-eu-oecd-report-integration-migrants_en) 2019.08.27
- European Commission. (2018b).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Special Eurobarometer 469.
- Fell, E., & Dyban, M. (2017). *Against Discrimination: Equality Act 2010 (UK)*. The European Proceedings of Social & Behavioural Sciences.
- Gaspirini, W. (2010). *Intercultural dialogue or integration through sport? European models under scrutiny*. In W. Gaspirini and A. Cometti (Eds.) Sport facing the test of cultural diversity. 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Gidley, J. M., Hampson, G. P., Wheeler, L., & Bereded-Samuel, E. (2010). *Social Inclusion: context, theory and practi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5(1), pp. 6-36.

- Glass, E., & Sheffield, D. (2008). *Best practices i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Library Settlement Program (LSP) Toronto Public Library*. Proceedings from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4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Quebec.
-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1). *Equality Act 2010: Public Sector Equality Duty*. What do I need to know? A Quick Start Guide for Public Sector Organisations.
- Guest, A. M., & Stamm, K. R. (1993). Paths of community integration. *Sociological Quarterly*, 34, pp. 581-595.
- Hayes, A., Gray, M., & Edwards, B. (2008). *Social inclusion: Origins, concepts and key themes*.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Ben\\_Edwards12/publication/322160853\\_Social\\_Inclusion\\_Origins\\_concepts\\_and\\_key\\_themes/links/5a49c7e5458515f6b058d2f3/Social-Inclusion-Origins-concepts-and-key-themes.pdf?origin=publication\\_detail](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Ben_Edwards12/publication/322160853_Social_Inclusion_Origins_concepts_and_key_themes/links/5a49c7e5458515f6b058d2f3/Social-Inclusion-Origins-concepts-and-key-themes.pdf?origin=publication_detail)  
2019.08.27
- Heath, A. & Richards, L. (2016).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and their antecedents: topline results from Round 7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Topline Results (7). Retrieved from  
[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docs/findings/ESS7\\_toplines\\_issue\\_7\\_immigration.pdf](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docs/findings/ESS7_toplines_issue_7_immigration.pdf) 2019.08.28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Glossary on Migration*. 2nd edn. Geneva: Switzerland. (국제이주기구) 이주 용어 사전 제 2판. 26.
- Jackson, C. (1999). *Social Exclusion and Gender: Does One Size Fit All?*.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1(1), pp. 125-146.

- Jeannotte, M. S. (2008).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 Brief examination of concepts and issues*. In UN Experts Group Meeting, pp. 1-15.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gislation. (n.d). *Equality Act 2010. Chapter 15*. Retrieved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data.pdf> 2019.09.10
- Mitchell, A. & Shillington, R. (2002), *Poverty, In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Toronto: Laidlaw Foundation.
- NHS Equality and Diversity Council. (2017). *Annual Report 2016/17*. Retrieved from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7/09/nhs-edc-annual-report-16-17.pdf> 2019.09.10
- Nottingham Trent University. (2015).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Policy*. Retrieved from [https://www.ntu.ac.uk/\\_\\_data/assets/pdf\\_file/0032/275954/tc1617-equality-diversity-and-inclusion-policy.pdf](https://www.ntu.ac.uk/__data/assets/pdf_file/0032/275954/tc1617-equality-diversity-and-inclusion-policy.pdf) 2019.09.1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9*.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c3e35eec-en.pdf?expires=1580303322&id=id&accname=ocid177525&checksum=9768751848A7DE9FECB2BBA3F9AE9D13> 2019.09.10
-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Union, Brussels.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307216-en.pdf>

- ?expires=1580303385&id=id&accname=guest&checksum=7E348B  
BF9DB62B67324A09F62C2C158F 2019.09.10
- Pero, R. P. (2017). *The New Local Governance of Immigration in Canada: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and their role in 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Ontarian Cities*.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 Prince, C. (June 24, 2019). Canada's settlement and integration model [ppt]. Retrieved from <https://www.internationalmetropolis2019.ca/assets/pdf/integration-eng.pdf> 2019.09.10
- Rimmerman, A. (2012).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diger, A., & Spencer, S. (2003).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policies to combat discrimination, paper presented at OECD/European Commission Conference, 'The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Migration'*, Brussels, 2003.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migration/mig/15516956.pdf> 2019.09.22
- Scheve, K. F. & Slaughter, M. J. (2001). *Globalization and the Perceptions of American Worker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ilver, H. 2010. Social Inclusion Policies: Lessons for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2) (Winter), pp. 183-211.
- Therborn, G. (2007) Presentation. Expert Group Meeting on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Paris, France, 10 - 13 September 2007

-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and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SPD and DESA). (2009).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sa/socdev/egms/docs/2009/Ghana/inclusive-society.pdf> 2019.09.10.
- United Nations. (2016). *Leaving no one behind: the imperative of inclusive development.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2018). *Capacity Building to Support Government in Promoting Social Inclusion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Retrieved from [https://www.cn.undp.org/content/dam/china/docs/ProDocs/UNDP-CH-DG-ProdDoc\\_56779.pdf](https://www.cn.undp.org/content/dam/china/docs/ProDocs/UNDP-CH-DG-ProdDoc_56779.pdf) 2019.09.10.
-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C.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pp. 8-24.
- Vedlitz, A. & Zahran, S. (2007). Theories of ethnic social distance: Comparative empirical tests for three distinct ethnic groups. *Sociological Spectrum*, 27, pp. 585-603
- Walker, A. & Wigfield, A. (2003), *The Social Inclusion Component of Social Quality*. Amsterdam: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pp. 1-31.
- Ward, C, & Masgoret, A-M. (2008).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ew Zealand: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 pp. 222-243.
- World Bank. (2013). *Inclusion Matters - the Foundation for Shared Prosperit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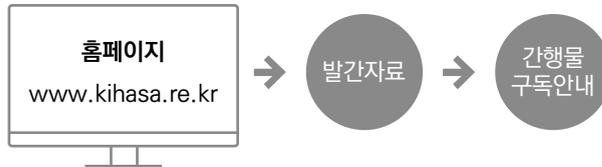
###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